

12 체불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

① 정책사업명	체불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		
② 추진배경	체불 및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		
③ 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○ 부당해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		
④ 사업부서	근로기준정책과	⑤ 담당자	오영민 과장 강승헌 서기관
⑥ 선정기준	국정과제	⑦ 사업기간	'17.5월~'22.5월
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
○ 재직자 체당금,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	'21.4.13.공포 (21.10.14.시행)	이재갑 장관 박화진 차관 권기섭 실장 최현석 국장 여성철 과장 정장석 사무관
○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(400→최대 1,000만원, '19.7월) 및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(최대 1,800→2,100만원 20.1월)	'19.6.7.발령 (19.7.1.시행) 12.27. 발령 (20.1.1.시행)	박화진 실장 김대환 국장, 김경선 국장 여성철 과장 조경선 사무관
○ 근로감독관 확충 및 전담조직 (근로감독정책단) 신설	'19.4.16.	김경선 국장 최태호 과장 김경민 사무관
○ 「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」 마련·시행('19.9월)	'19.9.10.	권기섭 국장 편도인 과장 김경민 사무관
○ 「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」 발표·시행('19.1월)	'19.1.17.	김경선 국장 곽희경 과장 김용주 사무관
○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18.5월~10월)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	'17.12월~	김왕 국장 최태호 과장 박원아 서기관
○ 부당해고 후 복직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 포함	'17.10.10.	정형우 국장 이덕희 과장 윤주섭 사무관